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3:30
배포일시	2025년 5월 15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50, press@kdi.re.kr)
담당자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63, shlee@kdi.re.kr)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

- 일 시: 5월 15일(목) 13:30 ~ 17:10
- 장 소: KDI 공용동 6층 대회의실
- 주 최: KDI, 한국은행

- KDI와 한국은행은 5월 15일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본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조 원장은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 [세션 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해 평가해도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 그러나 노인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에서 기인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제안

□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향후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소비 진작, 노인 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 의향이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 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션 2: 고령화 대응 방안]에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기대 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령 노동 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 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 자영업자들은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

- 고령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은퇴자와 지방 중소기업간 매칭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 및 개회사 전문 (15일(목) 14:00 배포)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 ~ 13:50	<p>개회식</p> <p>개회사 조동철 KDI 원장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p>
13:50 ~ 15:20	<p>세션 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p> <p>발표①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발표②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p> <p>좌 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p>
15:40 ~ 17:10	<p>세션 2. 고령화 대응 방안</p> <p>발표①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발표②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p> <p>좌 장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장 엄상민 경희대학교 조교수</p>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세션 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 1.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하여 평가하여도 노인 빈곤은 심각한 수준
 - 2010년대 이후 노인빈곤율은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평가할 경우,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에 비해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그러나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 기인
 -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에 따라 빈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도 세대 간 차이는 뚜렷함
 - 이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와 누리지 못한 세대 간 경제 수준 차이 확대와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주로 기인
 -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고령층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고령층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
 -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재정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전환해,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

[세션 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 2.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3%가 향후 주택 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의 상품설계를 보완하면 가입 의향은 평균 41.4%로 더욱 높아짐
-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 의향이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임
 - * ① (낙관적 시나리오)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며 최소 34만명이 노인빈곤 탈출
 - ② (보수적 시나리오)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낙관적 시나리오 수치의 1/20 이하에 그침
 - ③ (중간 시나리오)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
- 따라서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
 - (i)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ii)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 (iii) 홍보를 강화하여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iv)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
 -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
-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필요
 -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 (i)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ii)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 (iii)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iv)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

[세션 2] 고령화 대응 방안

발표 1.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초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고령 인구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오늘날의 '젊은 고령층'은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높은 학력 수준과 생애 경력을 바탕으로 고연령대 경제활동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충격이지만, '젊은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

-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서 정년 이전 조기 퇴직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는데, 그 배경에는 경기 악화시 고임금 장기근속자부터 우선 내보내는 관행이 작용
 -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낮은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이나 구직 포기 비중이 높고, 재취업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 내지는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로 이동
 -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정년 상향은 인력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

- 새로운 고령 인구의 활용을 위해서는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
 -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장기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 비정규직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촉진
 -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점진적인 정년 연장 추진

[세션 2] 고령화 대응 방안

발표 2.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

□ (검토배경) 앞으로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될 예정,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 자영업자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③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임.

*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65.7%가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 등에 종사(농림어업 제외시))

**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 은퇴자 자영업 진입동기) 마이크로데이터·실증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령층이 은퇴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영업이 임금 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임금일자리 → 자영업)의 46%는 생계형(저연금·고근로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계속근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응)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 고령층이 기존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

○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임금근로를 창출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를 매칭